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07호
2021.5.24

정책동향

▣ 북한 건설공제제도의 이해

시장동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CEO 리더십 변화 필요

산업정보

▣ BCG, 2021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

▣ 영국 공공 발주체계의 MMC 육성

건설논단

▣ 지방소멸 대응,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한다

북한 건설공제제도의 이해

- 우리 건설기업의 북한 진출 지원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

■ 건설공제, 미래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건설기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손실을 보상

- 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회복비용을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그 성격이 보험(保險)과 유사함.
 - 그러나,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건설공제는 가입대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는 상이함.
 - 법률적 의미로서의 공제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손실로 위험에 처한 공제 가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미리 위험의 전가를 약속한 공제조합 등에 위험 회복의 책임을 넘기는 것임.
 - 공제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및 공제기관으로 리스크의 전가 그리고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받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는 건설기업을 위한 다양한 건설공제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전무(全無)

- 현재 국내에는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근로자재해공제 등 다양한 건설공제 상품이 있음.
 - 건설공사공제 : 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 및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등을 보상.
 - 조립공제 : 기계·설비, 플랜트 등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목적물 및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등을 보상.
 - 영업배상책임공제 : 피공제자의 작업수행 또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이밖에, 국내에는 근로자재해공제, 완성공사물공제, 공사대금채권공제, 화재종합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공제 등 건설기업의 사업을 돕는 다양한 건설공제 상품 존재함.
-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 건설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제 상품이 없음. 단, 북한의 재산(손해)보험은 우리의 건설공제와 성격이 유사하여 건설공제 상품으로의 대체 가능성은 존재함.
 - 북한의 「보험법」에서는 보험을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우리의 건설공제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국가 및 개인의 재산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며,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북한의 재산보험에는 건설공사 및 설비조립보험, 화재보험, 선박보험, 화물수송보험, 비행기 보험, 기계파손보험, 철도보험, 자동차보험, 산림보험, 농작물보험 등이 있음.
- 현재 북한에서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북극성보험회사’, ‘삼해보험회사’, ‘미래재보험회사’ 등 다수의 기업이 손해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951년에 설립되어 국제보험 업무를 수행하던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2005년에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국내 보험업무(생명보험 등)를 인수한 이후 북한 내 대부분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2016년 설립된 ‘북극성보험회사’는 북한에서 화재·기술·신용·농업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삼해보험회사’는 해상·항공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음.
 - 2017년에는 부동산·기술·해상보험과 및 북한 최초로 재보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재보험회사’와 보험 중개 전문 기업인 ‘무지개중개회사’도 설립되어 영업 중임(<표 1> 참조).

<표 1> 북한의 보험회사

설립일	기업명	취급 상품
1951.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북한 내 대부분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종합 보험회사 / 2005년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생명보험 업무 인수
2016.8	북극성보험회사	화재·기술(기계파손, 이윤손실, 건설공사, 완공된 구조물보험 등)·신용·농업보험
2016.8	삼해보험회사	해상선체·해상화물·해상배상책임보험
2017.10	미래재보험회사	부동산·기술·해상보험 / 북한 최초의 재보험 전문회사
2017.10	무지개중개회사	보험 중개업

자료 : 임기수(2021), 「북한의 금융 및 보험제도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북한 건설공제의 이해와 새로운 상품의 발굴은 북한 진출 지원을 위한 필수 전제

- 지난 2005년 7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을 통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보험가입은 남북 간의 합의가 우선됨을 명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20조(보험가입 등) : 북측지역에서 남측 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 리용, 보험가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북·남 당국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사업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에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보험 취급기준”을 제정하였음. 동 기준 제3조(적용 대상 종목)에 기술된 경협보험으로는 “지분 등 투자보험”, “대부 등 투자보험”, “권리 등 투자보험” 등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보험 취급기준” 제정 이후에 우리 기업의 북한 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및 보험제도 활용 논의는 정부 및 업계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음.
 - 우리 건설기업의 북한 진출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急)진전될 수 있음. 북한 공제제도의 이해 및 활용 가능한 건설공제상품 발굴을 위한 노력은 북한 진출 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이며 이는 정부와 건설전문 공제조직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함.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CEO 리더십 변화 필요

- 코로나19 이후 '소통능력과 유연한 사고 방식'과 '위기관리 능력' 중요해져 -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리더십의 변화 요구

- 코로나19(COVID19) 이후 증가된 환경의 불확실성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리더의 경영 스타일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 생산성 향상 중시, 조직 내 MZ세대의 등장, 근로자의 안전 등과 같은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음.
 - Deloitte는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속에서 조직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리더의 사고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즉, 탄력적 리더십(Resilience Leadership)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함.¹⁾
- 본 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건설업체 CEO(Chief Executive Officer,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에서 이전과 다르게 중요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EO가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전 '의사결정 능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관리 능력'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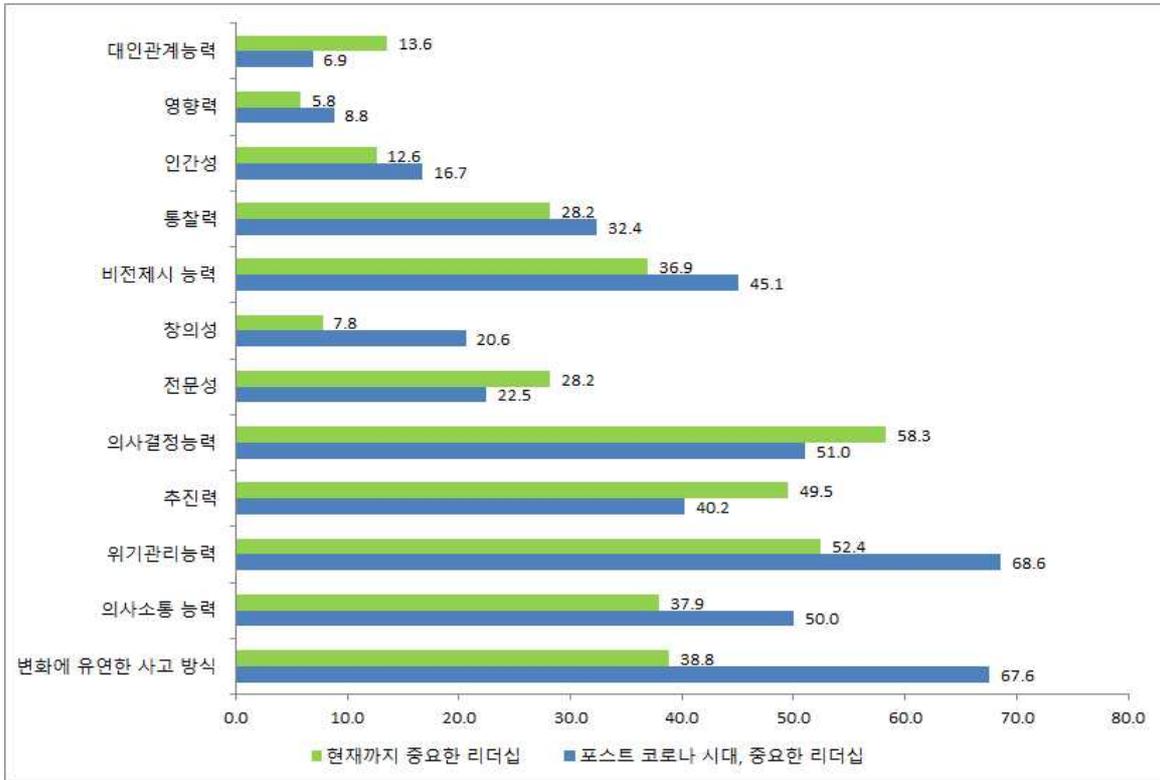
-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설업체 CEO 리더십으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6%가 '위기관리 능력', 67.6%가 '변화에 유연한 사고 방식', 50%가 '의사소통 능력'을 꼽음²⁾.
 -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건설업체 CEO 리더십의 중요 역량으로 꼽힌 항목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냄. 즉, '위기관리 능력', '변화에 유연한 사고 방식', '의사소통 능력'은 기존에 다른 항목과 비교해 볼 때 우위를 차지하는 역량이 아니었기 때문임.
 - 기존에는 '의사결정 능력', '추진력' 등이 주요 역량으로 꼽혔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이러한 역량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함.

1) Deloitte Insight, 「The essence of resilient leadership, Business recovery from COVID-19」.

2) 본 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위 이내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응답자는 총 121명임.

- 결과적으로 불가항력적 전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은 ‘비전 제시’, ‘전문성’ 등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 코로나19 이전 중요 리더십 v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 리더십 변화



주 : 중복응답.

리더십 변화를 통해 향후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중요

- 코로나19가 가져온 리더십 변화는 건설업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임. 즉, 지금까지의 업무 방식 등이 빠른 속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리더십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됨을 의미함.
- 따라서 다가올 불확실한 리스크(예를 들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팬데믹 현상 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 내 CEO의 ‘소통능력과 유연한 사고 방식’ 및 ‘위기관리 능력’은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BCG, 2021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투자의 중요성 더욱 높아져 -

2021년 글로벌 Top 5대 혁신기업 : Apple, Alphabet, Amazon, Microsoft, Tesla³⁾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1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순위에서 애플(Apple)사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함.
 - 금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화이자(Pfizer) 등 제약사가 대거 순위권에 진입했다는 점임. 화이자는 제약사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0위를 기록했으며, 머크앤코(Merck & Co.)사가 35위, 노바티스(Novartis)사가 36위, 모더나(Moderna)와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각각 42위와 49위를 차지함.
 - 제약사를 비롯해 올해 순위에는 레노보(Lenovo) 등을 포함해 17개 기업이 새롭게 혁신기업으로 선정됨. 현대자동차(Hyundai)도 39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함.
 - 가장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한 기업은 일본의 자동차 생산기업인 토요타(Toyota)와 미국의 코카콜라(Coca-Cola)로 각각 20단계의 순위 상승을 기록함.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5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Samsung)는 한 단계 하락했지만, 엘지전자(LG)는 12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함.

<표 1>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1	Apple	Apple	18	LG Electronics	Target	35	Salesforce	Merck & Co.
2	Alphabet	Alphabet	19	Intel	HP	36	JPMorgan Chase	Novartis
3	Amazon	Amazon	20	Dell	Johnson & Johnson	37	Uber	Ebay
4	Microsoft	Microsoft	21	Siemens	Toyota	38	Bayer	PepsiCo
5	Samsung	Tesla	22	Target	Salesforce	39	Procter & Gamble	Hyundai
6	Huawei	Samsung	23	Philips	Walmart	40	Royal Dutch Shell	SAP
7	Alibaba	IBM	24	Xiaomi	Nike	41	Toyota	Inditex
8	IBM	Huawei	25	Oracle	Lenovo	42	Nestle	Moderna
9	Sony	Sony	26	Johnson & Johnson	Tencent	43	ABB	Philips
10	Facebook	Pfizer	27	SAP	Procter & Gambke	44	3M	Disney
11	Tesla	Siemens	28	Adidas	Coca-Cola	45	Unilever	Mitsubishi
12	Cisco Systems	LG	29	Hitachi	Abbott Labs	46	FCA	Comcast
13	Walmart	Facebook	30	Costco	Bosch	47	Novartis	GE
14	Tencent	Alibaba	31	JD.com	Xiaomi	48	Coca-Cola	Roche
15	HP	Oracle	32	Volkswagen	IKEA	49	Volvo	AstraZeneca
16	Nike	Dell	33	Bosch	Fast Retailing	50	McDonald's	Bayer
17	Netflix	Cisco	34	Airbus	Adidas			

3) Boston Consulting Group(BCG)의 「Most Innovative Companies 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2005년 이후 BCG의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순위에 포함되었던 기업은 179여 개로, 이 중에 8개 (Apple, Amazon, Samsung 등) 기업만이 매년 순위에 포함됨.

■ 성공적인 혁신 투자의 5대 요인

- 1,500명의 전체 응답자 중 75%가 혁신(innovation)을 기업의 3대 전략적 우선 가치 중에 하나로 평가함.
 - 조사 대상 기업의 60% 이상이 혁신 경영을 위한 투자 계획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여행, 관광 및 운송 분야의 기업 중 58%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함.
 - 혁신을 위한 기업의 투자는 산업의 구분이나 기업의 지리적 경영 위치 등과 같은 영향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음.
 - BCG는 혁신을 위한 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5대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5대 요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기업의 혁신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함.

<그림 1> 기업의 혁신 준비(innovation readiness) 5대 요인



■ 코로나19 대유행은 글로벌 기업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혁신 투자를 기업 경영의 3대 전략적 우선 가치에 두는 비중은 지난 2020년 조사와 비교해 10% 이상 늘어 조사가 이뤄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예상 밖의 스트레스 테스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투자를 3대 우선순위에 두는 기업도 49%에 달함.
 - 이외에도, 고객 통찰력 향상, 반복적이고 신속한 혁신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 디지털 전환, 기업 투자를 통한 영향력 창출이 기업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 평가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영국 공공 발주체계의 MMC 육성

- 중장기 공공 발주계획 수립, 설계 및 구성요소의 표준화·디지털화 추진 -

■ 건설 생산시스템의 탈현장화와 영국의 MMC 체계⁴⁾

- 영국 정부는 숙련기술자 감소, 산업 생산성 정체 등 건설산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생산시스템의 탈현장화(Off-site Construction, OSC)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임.
 -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현장 시공방식 대비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효과가 뛰어난 모듈러 건설 활용을 촉진하고, 공공 인프라 조달 개선을 위해서도 OSC 적용 확대를 추진 중임.
- 2019년 영국 주택지방정부는 건설 사업참여자의 이해 제고 및 OSC 활성화를 위해 건설 생산방식을 7단계로 정의한 MMC(Modern Method of Construction)를 발표함.
 - 현장 외부에서의 2차원·3차원 구조체 및 주요 부재의 사전제작(①~⑤ 단계), 현장 투입인력 저감이 가능한 생산기술(⑥~⑦) 등을 정의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 공공공사 기획, 발주 및 현장운영 절차, 계약관리 지침을 담은 건설 플레이북

-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촉진과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민간 투자 지원 계획 등을 담은 국가 인프라 전략을 발표하였음.
- 국가 인프라 전략의 상세 추진정책의 하나로 정부는 12월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 기획, 발주, 계약, 운영지침 등을 담은 ‘건설 플레이북(Construction Playbook)’을 발간하였으며, MMC를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음.
 - MMC 활용은 전통적인 시공방식과 비교해 조달 효율성과 품질 향상,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UK BIM Framework 및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공공 건설사업의 MMC 등 공장제작 활용 확대(More Manufacturing-led Approach)를 통해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구성요소의 설계 표준화, 장기 조달계약 추진을 고려할 것임을 명시함.

4)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 사전제작 및 조립 등 탈현장 건설생산 등을 포함하는 현대적 건설생산방식을 의미함.

- ‘건설 플레이북’은 개별 발주기관과 중앙 정부의 발주계획 수립 및 종합을 통해 산업계의 MMC 활용 확대 및 관련 투자를 유도해야 함을 명시함.
 - 정부의 현재 및 향후 발주계획은 건설기업을 포함한 공급기업(Supplier)이 미래 건설수요 전망을 토대로 MMC 등 생산혁신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사슬의 다양성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개별 발주기관의 발주계획은 중앙정부의 인프라 총괄조직인 Infrastructure and Project Authority의 개별 사업 관점이 아닌 포트폴리오/프로그램 관점의 수요 종합을 통해 공공 부문의 MMC 활용 규모 및 지역별 발주 물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MMC 활용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 시설물의 공통 설계요소 및 표준 시방기준을 확대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 표준화된 요소의 활용은 설계의 반복사용 및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과 구매·조달 전반의 효율성 향상, 친환경적인 제조·생산 유도, 유지 및 운영비용의 예측가능성 향상 등 전 단계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시설물 조달과정을 공장제작과 유사한 제품 플랫폼(Product Platform)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발주기관들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을 도모해야 함을 명시함.
 - 발주기관은 발주 공사 또는 시설물의 공통적인 요건 및 표준을 점검하여 표준화 및 상호운용이 가능한 부품(component) 활용을 늘려야 함. 이는 지속가능한 파이프라인의 확보,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성 증가 및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공급기업들은 반드시 BIM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시방서 정의 및 데이터 분류, 정보 보안에 대한 지침 등을 포함하는 UK BIM Framework를 적용해야 함. 이는 사업 참여 주체 간 표준 정보저장 및 공유 체계의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추후 건설의 디지털 트윈 적용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공공 주도의 건설 생산시스템 전환 및 효율화 방법으로 벤치마킹 필요

- 개별 기술개발이나 단기적 발주물량 확보에 주력하기보다 공공공사 발주의 사업계획, 발주, 설계, 구매조달,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의 MMC 활용기반 구축 방법을 제시함.
 - 중앙정부와 개별 발주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BIM 기반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공유체계 활용 등 스마트 기술과의 융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지방소멸 대응,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한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전국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눈에 띈다. 실제 지방소멸이 지역의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행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다면 지방의 수요가 집중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해본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주민 정책참여 권한 강화, 지방정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보공개 범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그리고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자체 권한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 정책 이슈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보강, 비전 제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권인 인구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제집중도는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있다. 200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도시 개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명명된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역 핵심산업 육성전략 그리고 ‘규제 프리존’ 등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들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미래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인프라의 부족이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장·전시시설 등 문화예술시설, 의료시설, 산업·경제시설 등 모든 인프라에서 지방의 사정은 열악하다.

특히, 교통 인프라는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해도 사업 완료까지 수행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당초 의도한 사업 추진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특화지구의 지정, 개발방식은 이미 큰 실패를 보고 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지역특화지구의 개발은 실패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 경제의 쇠퇴를 불러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커지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 및 경제에 기반한 자족 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향후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지자체 및 정부의 지역개발이 대도시권 육성, 신도시 개발 등에 치중하다 보니, 실제로 지역민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도시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등 보다 정밀한 정책 추진은 여전히 미흡하여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 소속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들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지방소멸의 가속화 및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보다 특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출발은 지역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아주경제, 2021.5.10>